第281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2月19日(木)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5. 북한인권법안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7.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8. 공청회 개최의 건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8. 공청회 개최의 건 ····· 2
1. 2009년도 업무보고 ····· 2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삼 의원 대표발의)(이용삼·강창일·유성엽·문학진·허천·최인기·송훈석·박선숙·김상희·송영길·이윤석·김성곤·이계진·이광재·최연희·강기정·박주선·우제창·조정식·최철국·이춘석·서갑원·노영민·최규성·장세환·최욱철·황영철·원혜영 의원 발의) ····· 44
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임태희·주광덕·김정권·박종희·홍준표·신상진·김성태·배은희·권택기 의원 발의) ····· 44
4.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백성운·이인기·손범규·정옥임·윤상현·신지호·이학재·여상규·성윤환 의원 발의) ····· 44
5.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황우여·황진하·이경재·김소남·김효재·한선교·이한성·구본철·김성회·이화수·신지호·김옥이·조전혁·박상돈·김성수·양정례·정갑윤·진성호·현경병 의원 발의) ····· 44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박종근·이주영·허천·이철우·허범도·안상수·유정복·한선교·송영길·유승민·여상규·황진하·송영선·박대해·원희룡·이진삼·유기준·유재중·이계진·강석호·이인기·임두성·박준선·김학송·이명수·김정훈·윤석용·이상득·김성수·윤상현·김기현·신성범·최연희·이재선·이해봉·김효재·백성운·구상찬·홍정욱·윤두환·현기환·진영·정병국·이진

복·정몽준·김충환·이회창·홍사덕·김충조·나경원·김동성·황우여·이경재·박상천·정진섭·장광근·유정현·신상진·임해규·김성곤·김을동·성윤환·임동규·우제창·이성헌·고승덕·홍일표·정해걸·허태열·김태환·이사철·신지호·이석현·이시종·김소남·이용희·이인제·김영선·조진래·김정권·최구식·권영세·김선동·정진석·박선영·박진·전여옥·안홍준 의원 발의) ····· 44
7.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충환·류근찬·박상돈·변웅전·심대평·이명수·임영호·정영희·황진하 의원 발의) ····· 44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는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 폐쇄 그리고 남측 상주인원이 제한되는 등 남북 관계가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더 이상 진전 없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조성되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으로 남북한 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엊그제는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려운 시점에 새로 임명된 현인택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최근 남북 관계의 동향을 비롯해서 통일부의 업무현황과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의 중심체로 도약을 하고 있는 제14기 통일자문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사항 2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0분)

○위원장 박진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7항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간사 위원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

8. 공청회 개최의 건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8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과 김종률 의원, 이정희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이 각각 제출한 4건의 통상절차 관련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진술인 선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10시21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진 문학진 간사님!

○문학진 위원 현인택 통일부장관께서 장관 임명되고 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 차 국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 채택을 할 때 민주당 위원 전원은 청문회 결과보고 채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런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현인택 당시 장관후보자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슨 법적 기속력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처럼 하루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거나 또는 소화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과연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하면 도대체 국회의 스크리닝하는 절차라는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오늘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앞으로 국무위원후보자들에 대한 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각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바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들으면 놀라실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위증을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또 인사청문회법 등에 그 위증행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국회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국회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것은 엄청난 맹점이지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증을 했을 경우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제가 준비 중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증은 현행법상 위증죄로 고발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인택 현재 장관의 경우에 국회 모독죄 등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이것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문학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당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현인택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우리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현 장관께서 이런 점들을 정말 깊이 유념을 해서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적절하게 잘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황진하

간사님!

○黃震夏 委員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통일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민주당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퇴장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청문회 결과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겠는가 이런 말씀 하시면서 또 장관후보자 시절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청문회법이라든지 청문회 절차가 민주당 입장이든지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는 얼마든지 절차를 통해서 개선해 가지고 보다 청문회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그러한 적법절차를 다 거쳤고 또 민주당만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도 다 참석을 하셨고 또 한나라당 위원들도 장관 후보자 입장으로 계셨을 때 부적절함이든지 의혹이 나는 부분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다 묻고 어떤 것은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질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임명이 돼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시게 됐는데 이런 첫날서부터 '열심히 잘 해 달라' 이러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기보다는 그런 자꾸 이렇게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청문회 절차라든지 청문회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개정하는 의미보다는 통일부장관이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주는 의미를 더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청문회절차법이 개선돼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겠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 임무 수행하는 데 절대 위축이 되거나 또 소신 있게 임무 수행 하는 데 지장을 받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9일에 현인택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인사청문회를 바로 이 상임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과보고서를 만들 때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반영을 다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 안 하셨습니다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셔서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통일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보고를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맡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진심 어린 질책과 조언들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다듬고 채찍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통일정책에 대한 소중한 고견과 지혜들은 제가 통일문제를 새롭게 보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으며 유의해야 될 대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의가 무엇이며 정책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균형감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식견과 경륜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부족하나마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저는 앞으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입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는 보다 건강하고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경제·행복공동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관계 주요 동향과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유종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동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동향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최근 북한의 강경태도, 북한 내부 동향, 그리고 향후 정책추진방향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강경태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3월 29일부터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대남비난을 지속하며 강경한 태도를 점점 강화시켜 왔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즉 문산-봉동 간 열차운행을 중지시켰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였으며 개성관광을 중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체류인원과 방북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와 1월 17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군은 남북 간의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북한이 정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첫째,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해 체결했던 합의사항을 무효화하며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했으며 대북강경책인 비핵 개방 3000을 추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등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즉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은 모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강경 입장은 내부적 요인과 외교적 필요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남북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는 별도 논평을 내지 않고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평통 성명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기본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는 일방의 주장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NLL과 관련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며 북한이 침범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에게 상황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단체들에 대해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화폐 반입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이 핵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거부하여 검증 합의서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와 1월 13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핵보유국 간 핵군축 등을 주장하고 핵포기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남 핵우산이 제거될 때 가능하며 검증은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1월 17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무기 대 북한의 핵무기이며 미국의 핵위협이 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는 변할 수 없으며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강경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기대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는 NPT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북한과 핵활동 투명성을 인정받은 우리의 상황이 다른 만큼 북한의 핵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선 관계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6자회담 과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월 20일 개최되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초부터 내외 언론들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장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에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미사일 발사로 받게 될 여러 제재를 감안할 때 북한의 금지된 행위로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미 동북아의 우려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움직임에 분명한 대응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한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발사 준비를 시사하면서 이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6일 중앙통신을 통해 무엇이 날아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내부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외빈 접견, 군부대 시찰, 경제현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 보도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김정일은 방북 중인 중국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함으로써 건강이상설 이후 최초로 외교활동을 했습니다.

2월 17일 현재 총 23회 공개활동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 준비, 인민무력부장 및 총참모장 인사 등 김정일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경제는 만성적 공급 부족과 대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증가로 경제정책의 보수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는 금속공업 및 전력부문의 증산을 통한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한편 식량문제의 자체 해결을 독려하고 있으나 금년도 식량은 117

만t 부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남북교역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대중무역 규모는 급증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강화 및 과거 회귀적 동향이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선전선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사상 통제, 천리마 운동의 노력 동원과 자력 갱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강조 등 보수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기관 및 유관국과의 협조하에 최근 북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병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건강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의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호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남비난을 중단하고 상호존중과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해 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대화가 재개되면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통일부 업무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위원님들께서 '2009년 업무 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주평통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민주평통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점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장득순 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김영구 정책연구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민주평통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갈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사무처장님, 내용을 전부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을 요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먼저 간단하게 금년의 사업추진 목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운동 중심체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 인적구성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무지개운동을 전개하여 따뜻한 선진사회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식 재무장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00만 해외동포를 함께 묶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민주평통이 앞으로 거듭

나고 제2의 창립을 선언하는 바탕 위에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국민 속에 사랑을 받고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구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통일부와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이 지나고 마무리 시간을 위해서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여러 질의가 있었고요, 우리 장관님에 관한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여당 위원이지만 조건부 찬성이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장관후보자 시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명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사과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는데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그동안 너무 강경한 노선으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청문회에서 앞으로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앞으로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하였던 그런 입장이 있었음을 항상 상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현인택 장관께서의 역사적 소명은 지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대화의 국면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도 많이 의식을 하시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아랍과의 전쟁 영웅이었던 라빈 총리 같은 분들이 총리가 돼서 아주 유연한 자세로 아랍과의 관계를 풀어 나감으로 해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을 전례로 삼아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간단체가 북한 돈과 삐라 살포를 강행을 했습니다. 16일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남경필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치를 정부에서 취하지 않다가, 이게 사실 참 방치됐다가 실행이 됐는데요.

통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침에 변화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그 수사, 뭐 혐의 사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점 변함이 없습니다.

○남경필 위원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정현안이 있는데 북한 돈을 살포하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북한 돈 반입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로 북한 돈을 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다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명백한 우리 현행법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부시 정부 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은 포기할 명백한 의사를 보이면 관계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남경필 위원 이것은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돼서 이 경색 국면을 타결하기 위한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의 대북 정책 변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아니, 과거에는 핵을 포기해야만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그것을 명백하게 의사를 갖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북미관계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상당한 변화가 아닐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정책 리뷰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표명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장관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는 지금 같은 안보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또 국민의 민의를 수렴한 그러한 새로운 대북 독트린을 대통령께서 제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새로운 대북 독트린 문제는 뭐 저희로서는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새로운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남경필 위원 장관께서 취임 이후 하신 얘기들을 보면 인도적 지원, 특사 파견, 남북대화 재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가 됐고요, 또 야당에서 요구한 것과 공통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폭넓게 수렴을 해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북 정책 독트린을 새롭게 수립해서 발표하는 그래서 이 국면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장관께서는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전향적인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동안 구체성은 띄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성을 띄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 독트린을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째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표명을 하고, 둘째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셋째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특사 파견, 넷째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 등 아주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메시지를 담아서 새로운 집권 2년차의 독트린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남 위원님이 제의하신 여러 가지 말씀, 특히 우리 야당과 대화를 많이 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북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저도 청문회 과정과 지난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발언,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언론도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면—그 사이에 있는 '완전히 검증 가능' 이것은 다 수식어로 보고요—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 의미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핵 폐기 전이라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발언만 보고서는 사실 그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발언을 한 클린턴 장관이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내일 또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하게 돼 있고 또 들어와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더 그 발언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천 위원 이것이 기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나온 말이고 그 연설은 연설문을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한 발언입니다. 엊그제 일본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디다마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 발언의 내막이나 그 내용도 아직도 잘 몰라요? 이거 발언 나온 지가 꽤 됐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발언에 대해서는 하여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진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턴 장관이 오늘 저녁에 들어오게 됩니다만, 내일 한미 양국 간에 회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다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것은 클린턴 장관 개인이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미국 민주당 주변에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그전에 부시 정부 때와 같이 '완전 핵 폐기 후에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 하는 그룹이 있고 또 진보 쪽 일부 그룹은 '선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핵 폐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클린턴 장관이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분석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일 만나봐야 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분석들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클린턴 장관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클린턴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지도 않습니다. 내일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 한미 양국의 외교 당국자 간에 또 대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아마 좀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은 핵 폐기를 완전히 끝내기 전이라도 미북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지, 장관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정해진 바가 유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천 위원 아니, 장관의 개인 소신이 어쩌냐 말이에요. 이것이 변하고 있으니까, 오바마 정부 들어온 뒤에 약간씩 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부시 정부 때와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격변기에 장관의 소신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의 소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틀에서 6자회담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정해진 어떤 프로세스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박상천 위원 비핵 개방 3000하고는, 만일 이것이 핵 폐기 전이라도 미북 관계 정상화가 되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비핵 개방 3000은 미국·북한의 시각과는 다른 약간 동떨어진 정책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것은 폐기에 착수할 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옵니다, 비핵 개방 3000은. 그전에 뭐 1단계가 있지만 북한이 핵 폐기를 시작할 때부터 조치가 나온다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핵 개방 3000은……

○박상천 위원 다시 말하면 핵 폐기가 되는 정도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폐기하겠다는 말만 갖고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장관 개인 소신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발표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영향을,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비핵 개방 3000을 포함한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비핵 개방 3000 정책 자체가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더구나 그것은 그야말로 폐기 이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 지금 불능화 단계만 끝이 나면 바로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고……

○박상천 위원 아니, 검증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렇게 얼른 끝납니까?

핵 폐기를 시작을 해야, 쉽게 말하면 그거는 북한이 핵 폐기를 시작을 해야 뭔가 지원이 가는 정책입니다,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고. 그런데 핵 폐기 전에 이렇게 북미관계 정상화가 선행될 수 있다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중대한 엇박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시라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클린턴 장관이 내일 와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또 중국에 가서 한 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한, 원고를 가지고 한 그 말이 제일 중요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 구상찬 위원입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께서 안 주셔 가지고……

야당 간사 위원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장관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됐고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래서 더 훌륭한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마치시길 기대합니다.

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외교나 통일 문제의 토론은 치열하게 하더라도 국무위원의 뒷받침을 할 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자신과 소신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통일부의 자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는 차관께서 좀 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보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통일부 사이트에 200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차관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이걸 유심히 좀 관찰해 보니까 통일부 주요정책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통일부 사업을 5단계로 분류해서 평가하고 있지요?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이런 식으로……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전체 43개 평가과제 중에 '우수'가 15개 또 '다소 우수'가 16개, 4~50%가 다 잘했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좀 챙겨 보니까 보고서의 7번 항 같은 것을 보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협의 및 이행'이라는 과제에 우수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2008년도에 남북대화가 전면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군사 분야에서 '당국 간 대화 및 접촉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군사적 회담이 단절되어서 전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 이게 서로 자화자찬인데 이건 엄연히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또 2008년 10월 북측 요구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공갈·협박을 막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안정적 관리에 기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또 이렇게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면, 지금 NLL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이나 또 소규모 국지전에 대해서 걱정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산가족 교류 규모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핵심 성과로 지적한 것이 '당국 간 상봉이 중단됨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과 위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산가족 대상으로 정책 설명한 것이 이산가족 교류 규모를 확대한 겁니까? 아니시지요, 차관?

전부 이런 식이에요. 개성공단 1단계 내실화 과제에 대해서 총평을 보면 특히 개성공단 사업 자체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통일부의 일정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통일부는 다소 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우리 통일부가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평가는 열심히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목표가 작년 1년 동안에 북한 측의 요인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게 됨에 따라서 우리 외부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점을 좀 이해하고 통일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평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통일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면서 전부 '수, 우'를 줘 버리고, 장관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통일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장관직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통일부의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장관을 잘 모시려면 이런 것부터 자기 혁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자화자찬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평가는 아니지만 평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평가가 나왔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니까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김대식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통일무지개운동 전개로 따뜻한 선진사회의 기반 조성이라는 중점 사업을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내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간주할 만큼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찬 위원 예산 없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위원들을 중심으로…… 원래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통 위원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그런,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게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 갈등 해소 차원에서 우선 위원들 한 사람이 여섯 명씩의 통일 역군을 만들고 정확한 북한의 실상을 알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예산은 여기에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상찬 위원 아니, 10만 통일일꾼 양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예산도 없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산은 자체적으로 협의회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찬 위원 하여간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업은 숙성시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이회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委員 통일부장관, 청문회 때 고생하셨지요?

내가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장관은 통일 문제 또 남북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각 당 소속의 위원들이 물으시는데 부드럽게 그리고 또 모가 안 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당당하게 토론하는 그런 장관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다른 분들도 물어보셨는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일본 가기 전에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준비한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나 또 평화 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또 기자회견장에서, 사석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을 제거(eliminate)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당수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는 '핵을 모두 없애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부분, 상당 부분은 삭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표현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통일부장관께 물어보는 것은 지금 클린턴의 속마음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건 외무부장관이 상대할 상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통일과 남북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러한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일관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교적인 수사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 중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가장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진의를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會昌 委員 아니, 진의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 말한 걸로 봅니까?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기본적으로 클린턴 장관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의 폐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會昌 委員 좋습니다.

핵 폐기는 어느 경우에든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핵 폐기 선행을 양보하거나 하는 것이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틀려먹은 얘기예요. 어느 경우에도 핵은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이런 원칙을 우리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가지고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 공조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특히 지금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전략과 정책을 아직 확실하게 세웠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세우거나 또는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통이 잘된 한미 관계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핵 폐기 선행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공감을 얻고 또 같이 진행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장관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8년 남북 관계는 조정기이며 원칙과 유연성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의 내용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관되게 저희들이 남북 관계를 한편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또 그런 기조에서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해결하겠다 그런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대화 재개의 전략은 없고 피상적인 자화자찬 정도의 서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식량 지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제의를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박주선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노력하는 것을 지속하고,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 등 네 가지를 통일부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로만 '대화, 대화'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전략 내용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제가 장관에 임명된 지가 불과 한 3, 4일밖에 되지 않은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우리 정부 혼자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인 북한이 호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장관께서 어느 논문에서 대북정책은 첫째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 호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제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이 북한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못 얻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저희 정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저는 대화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파악한다면'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장관의 평소 소신과 철학에 의하면 이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무용의 정책이고 그래서 수정되어야 되고 내지는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박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작년 7월 이후에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에 북한이 모든 대화를 지금 닫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어떤 해결방안을 추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점이 열리면 저희들이 진의를……

○박주선 위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사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북한의 경우는, 대화의 상대인 북한은 남한에게 대화의 조건으로 6·15,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거기다가 자존심은 상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 현인택 후보자의 내정 사실을 발표했을 때 '아마 대화는 될 수가 없고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를 안 합니다마는 적어도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거기에 대한 이행의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에 대해서는 하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자제하도록 당부해 왔고, 북한 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노력 하시는데 10·4 선언이나 6·15 선언은 양국 정상이 서명을 한 합의문서입니다.

그러면 이행을 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천명을 해야지요. 왜 이행에 대한 천명은 안 하면서 또 통일부 업무보고에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또 대북 전단 살포도 그렇습니다. 북한 돈이 유입된 그 내용을 수사의뢰한 것이지 대북 전단 살포행위 자체를 단속하라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강구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단 살포행위를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가 거부되면 살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주선 위원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시간 다 지나가니까.

법률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뭐냐 이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조건은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대화를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실천적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자제를 넘어서 법적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북한 사람과의 접촉, 통신, 회합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단 살포행위 자체도 신고를 하라고 하는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현행법상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박주선 위원 현행법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법률개정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조건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려 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겁니까?

이번에 힐러리 장관이 오면 남북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제를 깔고 북·미 접촉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라도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마지막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남북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대화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미 국무장관이라도 여기 오면 만나서 북한과 미국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톱 다이렉트 디플로머시(top direct diplomacy)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남북한 대화를 좀 하게 해 주는 조건을 가미를, 첨부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남북 간 대화는 남북 당사자가 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박선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내일 클린턴 장관이 오지요? 통일부장관하고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아직 면담 약속이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직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대북정책 관련해서 미국하고 굉장히 현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왜 없습니까? 한미 간에 공조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청문회 과정에 있었고 사전에 그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연인 현인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을 통일 문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함포 공갈, 미사일 공갈 연일 해

댔지요? 비록 미사일 공갈은 지금 인공위성 계획으로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함포 공갈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긴장도 여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시고 통일부장관이신 현인택 장관께서 힐러리와 아무런 면담도 없고 협의할 시간도 기회도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양국 간에 외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인데 그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에 그런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약속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사적인 면담도 상당히 이루어졌고 갑자기 많이 이루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광고 보셨습니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나왔던 신문의 광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현대아산이 4월부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 정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정부하고 상의한 바 없으면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현대아산에서는 엊그제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습니다.

사업은 현대아산이 하지만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금강산 관광이 막히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지요. 그 어려움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어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나아가서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면 소득보전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해야지 국민을 죽여 놓고 이런 광고가 나오고, 50% 세일해서 관광객 모집하면서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하겠다 그러는데 통일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 또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박선영 위원 정부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물밑 작업도 없다면 이런 일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여권법에 따라서 살인이나 강도, 치안이 위험한 지역의 여행 제한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지난 2004년도에 만들어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따른 합의서, 이 합의서 누가 작성했지요? 통일부장관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은 그 사람이 정세현이든 현인택이든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10장에 보시면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인을 총으로 정조준해서 사살했어요. 그 어디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안 돼 있습니다. 이 합의서부터 고쳐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듯이 이번에 현대가 낸 광고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어떠한 사전논의나 그런……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사전논의 없었으면 사후에 통일부가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 들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물론……

○박선영 위원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이 광고는 2월 초부터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금강산 관광은 6·15 선언이 나은 사생아이자 기형아입니다. 그리고 합의서 분명히 잘못된 것 지금 제가 읽어 드렸습

니다. 이것 고치지 않는 한 그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하지 않는 한 국민을 총알받이로 사지에 내몰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유념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뭡니까? 재발방지하려면 이 합의서 고쳐야 가능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미 총격사건에 관해서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박선영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래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실 때 북한 동향을 말씀해 주시던데 북한 후계자 구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더군요. 누가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로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박선영 위원 그렇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박선영 위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미 어제 김정운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남이 되든 김정철이 되든 김정운이 되든 통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통일부에서는 누가 되는가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책을 분명히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의 특성이 있고 그를 미는 사람이 있고, 김정철 김정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사례별 대북정책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는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다음번에 4월에는 그것 밝혀 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적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08년도 12월 31일에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빠져 있었는데 오늘은 들어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를 기존의 해결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납북자 중에 전시 납북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납북자 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분명한 입장을 지금 말씀하십시오, 매번 추후라 그러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3,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위원 3, 4일밖에 안 됐어도 3, 4일밖에 안 됐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충분한 전문가라 그래서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방향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한나라당 홍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기울이고 계신 노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누차에 걸쳐서 북한이 자제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남북 간 공식 핫라인이나 특사나 이런 것들 전혀 존재하지 않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은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정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께서 통일부의 복지부동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공감은 하지만 관점은 약간 다릅니다.

통일부 직원들도 다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동안 리더십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안정,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무력도발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방지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해상 교전이나 미사일 발사 등 어떤 도발행위가 벌어진다면 저는 다시는 북한이 이런 무모한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진압해야 된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다시피 통일부장관의 몫이 아니지요. 통일부장관의 몫은 도발 전에도 또 도발 와중에도, 도발 후에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지금 냉전시대에도 가동되었던 핫라인마저 차단되었고 그렇다고 민간이나 외국특사를 통해서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지적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공식적인 라인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정욱 위원 북한이 무력도발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로우키(Low-Key)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의연해도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이 민간인이건 핫라인이건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를 활용하건 간에 끊임없이 분주하게 발을 움직이는 백조외교가 가동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께서 새로운 대북 독트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정책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데탕트 정책 한 세 가지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개념 축소인데요. 현실적으로 비핵은 한국이 홀로 풀 수 없는 문제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핵은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현재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개방의 전제라는 이런 오해만 계속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방의 전제는 사실상 지원의 투명성, 그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해만 양산하는 비핵과 개방을 분리해서 차라리 개방의 진정한 전제인 투명을 붙여서 비핵 개방 3000으로 하지 마시고 투명 개방 3000 혹은 투명 지원 3000으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햇볕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햇볕정책이 퍼주기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줬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원이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데 있거든요. 만일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면 이 지원을, 지원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 뭐라 할 국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14억 몇천만 달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정욱 위원 2조가 채 되지 않지요. 한 18억 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연간 ODA 규모가 한 10억 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2억 불 정도 북한에 지원하는 것 합해도 12억 불에 불과하지요. 그래봤자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저는 규모가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안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비핵 개방 3000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핵 개방 3000의 틀을 오히려 국제적,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한미가 함께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제무대에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핵은 우리 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관님께서 예전에 지적하

셨듯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점이 있지요.

○홍정욱 위원 그리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원하는 그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체제보장,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북·미 관계 정상화, 미국이 그 두 가지 꺼내 놓고, 북한은 비핵과 개방 꺼내 놓고,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도적 지원 꺼내 놓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한미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또 남북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욱 위원 비핵 개방 3000을 없애거나 고치시기 힘드시면 이것을 확대해서 더 국제적인, 포괄적인 틀의 정책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정말 비핵 개방 3000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전제조건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대안인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상당히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거의 전체 교역의 한 42%, 20억 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8억 불밖에 안 되고, 여기다가 무상원조까지 합하면 한 20억 불이 추가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해 줘 봤자 연간 2억 불 지원해 주는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40억 불을 의존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해도 북한이 체제위협을 무릅쓰고 나와서 우리에게 호응해서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은 참 요원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은 북한 스스로가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홍정욱 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북한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쉽지 않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홍정욱 위원 아까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햇볕정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때도 민간인, 대북특사, 핫라인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북 간 불신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국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물밑 간에 고강도 대화 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비핵 개방 3000을 고수한다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납득시켜서 현 대북정책을 고수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참 어렵고, 그렇다면 비핵 개방 3000을 축소 발전시키든지 확대 발전시키든지 해서 새로운 어떤 독트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장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독트린을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신낙균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에 보고하신 것, 남북관계 동향보고에서 북한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에 대남 비난을 지속하며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저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인 북한의 대응에 우리 정부는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남북관계의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둘의 강도가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강도인지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방법

은 대화제의, 이 대화제의는 지난 1년간 일관되게 통일부장관이 한 말인데 아무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향적이지도 않고 매우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아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이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짚을 것은 북한이 부정적으로 보는 현 장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남북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바마 정부는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 하고의 차이를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매우 공세적이고 실천적 방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설명한 것에 저는 '준비'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부장관님 보고서에도 인용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비핵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이것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시는데 제가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할 정도로 제거할 준비가 된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영구적 평화체제로 대체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 지원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하고 '비핵화한 후가 아니면' 하는 것을 확실한 전제로 놓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진의를 파악해야 된다고만 하면 매우 무책임하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지금 장관에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다고 해서 아직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매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다리는 전략의 또 하나 다른 면의 염려는 한국의 기다리는 전략이 한미동맹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통미봉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세적으로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오바마 정부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됐을 때 통미봉남이라는 것,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왜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말 실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소사이티에서의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클린턴 장관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의 폐기를 북한이 할 자세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낙균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자세가 있다면 하는 것인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사실상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발언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한미 간에, 당사자인 클린턴 장관이 오셔서 당국간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전 방향이 있을지는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동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이 말 자체로는 보면 외교정상화의 조건으로 핵폐기 완결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 앞으로 준비하신다니까 정말 저는 대전환의, 그래서 실기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통사무처장 한번 나오시지요.

최근에 2월 17일자 동아일보 칼럼에 '북 군사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런 제목의 글을 기고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신낙균 위원 저는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분을 망각한 채, 북한은 체제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지도부는 책임과 원인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북한의 군사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등의 강경발언은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평통의 사무처장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여깁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저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평통위원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통의 사무처장이기 전에 저는 또 교수로서 나름대로의, 동아일보에서 의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 의견을 이렇게 밝혔는데 추후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면 앞으로 추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낙균 위원 작년 신동아 11월호에 인터뷰한 기사하고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것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말하시고 원문하고 얼마나 상충되는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맡으신 직책에 그 임무에 맡게 언행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신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끝으로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나라당도 하고 하지, 야당 혼자만 다 해 버리면……

○송영선 위원 나는 야당인데 안 했는데…… 아니, 순서대로 해야지요.

○김충환 위원 야당만 자꾸 하면 장관이 힘들지.

○송민순 위원 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만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조금 전에 평통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기고를 하시려면 개인의 의견으로 학자나 자연인으로 그렇게 기고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의 제목에 '평통사무처장 김대식'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적절치 않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런데 위원님, 제목은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송민순 위원 아니, 제목이 아니라 밑에 기고자의 이름을 그렇게 본인 직책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러한 조건을 잘 지키고 자기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통일부장관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북한이 무슨 미사일이든지 위성로켓이든지 하여튼 그러한 것을 발사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평화나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이고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도 다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해서 그것을 할 수 없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정부의 안보정책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비행기나 탱크, 함정으로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지요.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하고 또 남북 간에는 대화와 소통,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군사적 태세를 사전에 갖추어 두는 것인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러한 선행해야 될 대화와 교류, 협력, 소통을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에는 소홀히 하고 그저께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합방위회의를 소집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언론에도 부각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부분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위협 감소를 하고 그러한 포괄적 안보를 증진하는 데 국력을 모아야 되고 정부의 지혜를 쏟아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데 이렇게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느 곳에도 비핵 개방 3000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여러 여야 할 것 없이 제기돼 온 이 비핵 개방 3000은 간단히 말해서 일단 간판은 내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에 맞는 간판을 상생공영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생공영의 정책이라는 새로운 원 간판을 제대로 붙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지난 1년 동안에도 상생공영 정책과 같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 그런 점에서 그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은, 큰 타이틀은 상생공영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제 말이 그대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 간판은 상생공영으로 하고 보조 간판 비핵 개방 3000은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면서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통일부 업무보고 시기가 작년 3월입니다. 1년 다 돼 가는데 그때 이야기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6·15 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6·15, 10·4 선언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우리 스스로 준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 1조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상호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렇지요? 내정 불간섭 2조에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3조에 비방·중상 금지 있고 6조에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11월에 워싱턴에 가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최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제1조 상호체제 인정을 하고 존중한다는 것하고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지금 현 장관께서 국제정치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천명된 정책과 의도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그리고 시장경제에 맞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지금 이런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것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그런 것을 소위 스테이티드 폴리시(stated policy), 천명된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장관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으시고 대통령과도 말씀이 되시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의 원칙을 지킨다면 그것을 좀 확실하게 대통령께 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가치를 두고 있는 한은 상대방이 그것을 어기더라도 우리는 지키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가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나도 벗어난다, 네가 고속도로 규칙을 위반했으니까 나도 추월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인권법 같은 것을 먼저, 유엔인권위 결의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공동발의를 해서 하는 것은 기본합의서 정신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통일부 관료들하고 같이 다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 연구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고 원칙이거든요. 아니면 현 정부의 정책상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면, 그러면 아예 우리 국민들도 알고 야당도 다 잘 알게 '나는 기본합의서 정신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회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따져서 서로의 가치를 따지고 이치를 따져 보자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임 장관님께서 일관성 있는, 누가 봐도 일관성 있다 이러한 정책을 하시고 그 가치를 제가 부여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대북정책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6·15 선언이나 10·4 합의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지금까지 충실히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화통일 부분에 대해서서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남북한이 특수관계이자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서로 인정받는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점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는 우리 송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민순 위원님 끝으로 오전 질의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김충환 위원님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송영선 위원 무슨 근거로 김충환 위원님 먼저 하십니까?

지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자리를 비웠으면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교섭단체기 때문에 한번도 발언순서를 누구하고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칙에 따라, 여기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끊으려면 끊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 26번으로 있는데 왜 갑자기 올라옵니까?

뭡니까, 이것은?

○委員長代理 黃震夏 지금 문학진 위원도 여기 간사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양해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정몽준 위원이 나가셨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박선영 간사님도 찬성하셨어요? 제가 상의하는 것 못 봤습니다.

○박선영 위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이랬다는 얘기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국회의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때까지 원칙이, 묵시적인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리가 비면 밑의 사람 올라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黃震夏 그것은 유념을 하겠고요.

말씀하세요.

○김충환 위원 글쎄, 원칙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의 상식으로 볼 때 교섭단체 중에 특히 여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죽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교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게 합리적이고, 또 오늘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위원이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뭘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송영선 위원 아니,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김충환 위원 다른 위원회 다 가보세요. 다 그런 게 관례로 하기에 따라 달려 있지.

○송영선 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계속 질의할 때 여권이 했으니까 야당도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저 발언 안 할 테니까 끝내시고, 앞으로 운영을 제가 드린 말씀은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있는 것이고 각 교섭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교섭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거야.

○송영선 위원 저도 야권이니까 저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저도 그러면 교섭해서 앞으로 뛰어 들어

가도 됩니까?

○김충환 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송영선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黃震夏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문학진 간사하고도 양해가 되고 그래서 김충환 위원이 오후에 무슨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양해가 된 상황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영선 위원 순서가 김충환 위원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고 여기서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저한테 양해 구했습니까?

○문학진 위원 송영선 위원 말이 또 상당 부분 맞아요.

○송영선 위원 아무리 제가 비교섭이라서 간사가 없지만 그것은 서로에 대한……

○委員長代理 黃震夏 아니, 비교섭이라고 해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송영선 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저한테도!

○김충환 위원 위원장, 제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취소하시겠어요?

○김충환 위원 예.

○委員長代理 黃震夏 그럼 취소하지요.

오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끝내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문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회의에 참석하셨던 통일부장관께서 차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를 본 위원장에게 구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학진 위원 차관회의에 무슨 장관이 가?

○委員長代理 黃震夏 아니, 통일부차관이 차관회의에 참석하지요.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黃震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는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영 위원 이미경 위원님이 먼저 하신대요.

○이미경 위원 제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이미경 위원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또 하기로 했어요.

○委員長代理 黃震夏 순서를 확실하게 해 놔야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미경 위원님 하세요.

○이미경 위원 이왕이면 '하세요' 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委員長代理 黃震夏 이미경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하세요' 이러면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국회이지 군대가 아니니까……

(웃음)

이미경 위원입니다.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선 핵 폐기론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와 통일부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였는지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병행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현실적으로 북한 핵 폐기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로 한 다자협력이 있고 남북협력이 또 함께 진행되고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핵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하고 있고 외교부가 관여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주도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 통일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남북협력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진행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투 트랙으로 확실하게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에 통일부와 또 현인택 장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사족으로 하나 붙이자면 지금 남북관계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에, 작년 7월 이후 아주 경색돼 왔습니다. 더더구나 경색돼 왔지요. 그러나 6자회담은 진척되었고 6자회담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중유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 8월 달에 0.6만t 했고 2008년 9월에도 1.6만t 했고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외교부 보고 받으면서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유는 줘 나가면서 지금 통일부의 역할은 계속해서 축소돼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북 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10·4선언의 이행을 주제로 북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행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행 협의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아시는 대로 비핵 개방 3000의 1단계와 지금 6자회담의 2단계가 불능화 단계에 맞추어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유도 지급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비핵 개방 3000의 1단계 지나면 우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의 논의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다 하더라도 이제는 보다 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동안 취임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고 또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수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부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일을 오히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앞으로 현 장관께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다음에는 통일부가 초기단계부터 통일부 존폐론이 오고가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의 인원 축소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일부 인원이 그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80여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가 올해 2월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내서 또 각 부처의 일종의 구조조정이지요, 그걸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중점 감축 대상인 과장급들이 실질적으로 중간 역할,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실무 총 책임자들이 줄어들면 통일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 통일부는 몇 가지 본연의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좀 추스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애초에 청문회 때도 폐지론 이런 운운이 있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왕에 지금 통일부장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여러 한나라당 위원님들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알려진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일정하게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그 수정이 있으면서 통일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걸 하려고 하면 애초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잡았던 통일부의 역할과 또 인원과 위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러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실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 열렸을 때 민주평통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이미경 위원 그리고 오히려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지적도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숫자를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숫자는 국내 숫자를 줄이고 해외는 조금 확대를……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요.

오히려 숫자를 줄이라고 했는데 해외 인원은 숫자를 더 늘린다 그건 무슨 계기로 그렇게 해외 인원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까?

지금 해외 재외동포들한테 투표권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숫자를 늘려서 투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도움을 받자 이런 뜻으로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정감사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외에 있는 750만 우리 동포들이 민족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엮어서 정말 국제여론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하고 또 여기 민주평통은 어디까지나 초당적이고 헌법기관인데 거기에서 선거하고 결부시키고 이런 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있잖습니까, 지금 재외동포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리해 주세요.

○이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표권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해외동포 사회가 시끄럽게 되거나 분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평통에 대한 우리 국회의 시각이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늘린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우리 국민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교구장을 맡고 계실 때 평양교구장을 겸임하시면서 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셨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내일 장례미사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을 떠나보내면서 이분의 생전의 어록을 한번 제가 쭉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이 세계에 드러나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 체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내에 친북좌파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시면서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햇볕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내부에서 일부 세력과 과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로부터 공격과 매도를 당하기도 했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신은 끝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필요한 건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나라와 수교를 해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고, 2002년도에 장길수 군 친척 망명 실패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망명 실패를 마음으로부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한다. 우리 정부는 탈북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대화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6·15 합의도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남북 정부는 체제 못지않게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한의 자세와 체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북한이 민족 공조를 앞세워 남한에 친북과 반북 등 남남 분열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심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한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 위협을 계속하는 등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대북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 등 가시적인 변화로 신뢰가 먼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인권 유린을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이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협조를 다함으로써 한반도에 자유민주체제가 이룩되도록 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이 남기신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기경님의 영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는데 장관님이 총리께 질문한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요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영공이 아닌 공해 상에서 미국이 요격을 한다면 그게 국제법상 큰 문제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제가 권위 있게 답변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국민 홍보, 대내외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평통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대북정책에 대한 또 통일 교육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계신데요. 민주평통도 통일무지개운동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양쪽 기관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영 위원 예, 진영 위원입니다.

비핵화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비핵화는 전혀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진행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비핵화가 잘되도록 우리 장관님께서도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6자회담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 잘될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도 그걸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6자회담 같이 진행된 회담은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6자회담이 어떻게 잘 가게 하느냐, 그러면 미국 정부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6자회담이 왜 제대로 성공을 못 했느냐 말이지.

2·13 합의하고 나서는 금방 불능화는 그해에 다 되고 그다음 해만 가면 핵 제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

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라고는 불능화 자체도 잘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에서 혼돈이 와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 자신도 혼돈스러울 정도로 이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미국 관계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속도가 난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뭐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외교적 수사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써 가지고 일단 합의했다고 발표만 쫙 해 놓고 그거 나중에 다 뒤집어지고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실망이 많이 컸는데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요구 하고 있다고 지금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6자회담이 쭉 진행된 걸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요구를 할 가능성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비핵화의 조건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북한과 미국 관계의 정상화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경제 지원, 그 외에 또 뭐가 있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것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요.

○진영 위원 그거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의 진행에 따라서 한쪽 축이라고 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잘됐을 때는 미국과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것은 상당히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대사급 교환은 상당히 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진행됐을 때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 중간 시나리오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평화체제를 포함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있고 에너지 지원에 경수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경수로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경수로 지원은 9·19 공동성명에 적당한 시기에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포함이 되는 걸로 봅니다.

○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의 정부에서는 한 번 인정한 적이 있으니까 경수로까지는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진영 위원 보통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포함이 안 됐다, 9·19 어디를 봐도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부분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장관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잘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될 데는 저는 북한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미리 다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 발표랄까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막 나와 가지고 회담이 아주 미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차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자회담을 옆에서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걸 제 자신이 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이랄까 아니면 6자회담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자꾸 들고 나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몇 달 끌면,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북한에 끌려가게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6자회담에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자꾸 나오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벌써 북한에서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북핵 폐기만을 생각하고 쭉 진행해 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벌써 한반도 비핵화해서 군축회담 하자는 걸 보면 옛날에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 지대화 그런 부분까지도 꺼낼 가능성이 많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다 결론을 지어야 한 번 합의한 다음에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적당히 합의해 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늦고 늦고 늦고 그래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룩하려던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고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6자회담도 보면 이

명박 정부 들어서 양보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기 전에 미국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한에도 얘기해야 되고 말이지, 그래야 비핵화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어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요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보면 비핵화가 장기화 될 때도 사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남북 관계도 잘 되지만 장기화됐을 때는 장기화된 대로 우리가 또 남북 관계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전 정부가 세워 놓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정할 거면 빨리 수정해서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뭐다' 알 수 있지요. 상생과 공영 이것만 가지고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국민에게 빨리 알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건 발표하고, 상대가 있으니까 계획대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입장 정리는 다 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영선입니다.

현 장관님, 제가 청문회 때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각을 아주 분명히 하시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보여 주십사 하는 것을 그때도 주문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 장관님을 임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서로 통하고 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번 10년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지한 대화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진지하면 나온다, 우리가 진지해서 나올 북쪽인 것 같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는 깡패집단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만 진지하다고 나올 거라는 이런 아주 철학적인 말씀하고 계시지 말고 분명하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투명하고 분명한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이행해 주시는 장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이회창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클린턴 장관 발언 자체가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입니다. 진짜 속된 말로 선수끼리 왜 그러십니까? 그 수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클린턴 장관이 하는 말은 핵 포기하면 그 대가를 확실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와서 들어 보고 판단…… 만약에 그것이 진짜 장관님의 진정성이라면 저는 너무 태평성대식의 장관직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문회 때도 똑같은 질의가 한 세 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98년 이후 대북지원 총액이 얼마냐?' 하니까 '지금 계산하는 중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부 다 뒤져 보십시오, 계산해 놓은 숫자가 있는지. 제가 6개월 동안 자료를 모아서 계산한 것이 70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현금, 미국이 준 중유, EU가 지원한 것 다 합쳤습니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긴박성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시는 태도나 그 매너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신사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태도가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도 그렇게 분명성이 없이 점잖은 부분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다음으로 제가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북한 해운합의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대충요.

○송영선 위원 남북한 해운합의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남북한 간에 선박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몇 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716회입니다, 전번 달 말까지 해서.

그런데 716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해경이나 해군의 임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전번 17대 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북한 선박 운항허가서는 실질적으로 비국적선을 허락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비국적선이, 북한 상선이 아닌 비국적선이 이 716회 중에서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락거린 것이 145회입니다. 그런데 145회 중에서 열일곱 번 전기아연과 강철과 시멘트를 실어다 날랐습니다. 그것도 편도만 말입니다. 돌아올 때는 빈 배입니다. 제주해협을 거치면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하기 전의 해로에 비해서 5시간 40분이 줄어들고 기름값이 사실은 60불 기준으로 해도 한 130만 원 이상 득을 보는데 그런 배가 왜 빈 배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군사시설, 전기아연하고 강판은 장비제조 특히 미사일 설치, 핵 시설에 쓰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운합의서 제6조나 제8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10개의 금지항목을, 설사 선박 검문에 걸렸다 해도 선적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쫓아내는 것뿐입니다. 나포 안 됩니다. 압류도 안 됩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보면 적용 대상이 첫째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 제3국을 경유해 가지고 남북을 오가는 북한 선박입니다. 이게 되도록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실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은 좀 덜한데 아까 제가 말한 145회 같은 경우는 제3국에서 들어와서 북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은 제3국을 경유해서 북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검조차 안 합니다. 보니까 실은 물품들은 전략물품들입니다.

이것은 고장난 열쇠를 걸어 놓고 주인이 없는 것과 같고, 주인이 없고 문까지 열어두고 '훔쳐가지 마세요'라는 푯말을 붙여 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재 범위·방식을 보면 우리가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배를 세워서 검색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포할 수 없습니다. 제재수역도 보면 지정항로에서 열 가지 행위만 해당이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은 또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3함대사령부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나가는 해상로에서 20㎞만 가면 제3함대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5㎞ 가면 울산이 있습니다. 울산에 뭐가 있습니까? 울산에 일반 공장시설뿐만 아니라 고리원자력발전소 등등 정말 전략적으로 진짜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포항까지 40㎞입니다.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북한이 이 큰 선적을 타고 가다 고속선을 내려 가지고 여기 20분 만에 가면 충분히 교란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산까지 20분 안 걸립니다. 한 17, 8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2008년에 1년간에 걸쳐 가지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할 때마다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적극적으로 PSI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PSI 참여는 바로 남북해운합의서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제재방식이라든가 제재영역이라든가 적용대상이 바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쉬운 말로 표현해서 해운합의서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폐기하고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완전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장관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는 지금 통일부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를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든지 PSI 참여에 대해서 왜 한계가 있는지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것은……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리해 주세요.

○송영선 위원 궁극적인 방법은 세 부처가 앉아

서, 원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든지 폐기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평양에서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가 상호 기사 등의 교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이러한 내용의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난 2월 4일 이 언론본부가 신청한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해서 불허 통보를 했지요. 통일부는 불허 사유를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 저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 동 사업은 순수한 기사 교류가 되기 어렵고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 언론교류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별 기사에 대한 심의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남쪽 단체가 북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해당 매체에 싣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사별로 통일부의 심의를 거쳐서 실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그렇다면 개별 기사에 대해서 승인 또는 불허하면 될 것이지 기사교류사업 자체를 국가안보 저해 우려라는 냉전적이고 궁색한 논리로 이것 자체를 불허한 것은 이 사업 신청을 한 단체가 6·15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5 남측위 언론본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작권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6·15 남측위 언론본부는 여러 가지 우리 언론단체가 같이 모여 있는 성격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북측 단체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남측의 '통일언론'하고 북측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끼리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는 지금 남북의, 말하자면 주민이나 또는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얼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통일부가 사업 불허의 이유로 든 것이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신청을 한 이 언론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이 뭐냐 하면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인터넷기자연합회 등 한국의 주요 언론인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모독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전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정부는 순수한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좀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하겠는데……

다음은 민주평통사무처장이요.

어젠가 엊그제 오늘 업무보고를 앞두고 우리 보좌관들한테 이 업무보고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문학진 위원 그런데 그때 가져온 업무현황보고하고 오늘 여기 위원들한테 와서 한 업무현황보고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12페이지에 보면 '국민들의 도덕·윤리의식 재무장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평통이 전개를 하겠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들한테 사전에 설명한 자료에는

'수석부의장, 사무처장이 국내 232개 지역협의회 순방을 통해서 국정현안과 새 통일담론을 적극 전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했거든요. 우리한테 오늘 보고한 것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 평통이라는 것이 국정현안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게끔 돼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국정현안 문제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국정현안이라 그러면 민주평통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따끈따끈한 현안들을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하여튼 삭제를 한 것은 잘했는데 원래 보고자료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것저것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을 평통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니까 민주평통이 왜 설립이 됐고 왜 운영이 되고, 원래 취지에 충실해라 이 말입니다. 아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통일무지개운동하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한다 그러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문학진 위원 그런데 무지개운동이라는 것이 자문위원 1명이 국민 6명을 끌어들이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깔이니까.

그다음에 통일시대 시민교실 보면 '지역주민 100명 내외 규모로 추진하되 통·반장, 아파트부녀회장 등 대상을 세분화해서 전파력 극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무지개운동하고 통일시대 시민교실 이것이 꼭 선거용 조직 같아요. 처장은 어떻게 봐요? 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반장, 아파트부녀회장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아니,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 가셔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학진 위원 아니,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보면, 올 4월·10월 재보선 있지요, 그다음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잖아요. 동시선거인데, 그것 앞두고 평통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사업에 매진하는 것은 선거용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것은 헌법기관이고요, 초당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절대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흔적이 난다거나 그러면 문제됩니다.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수석부의장하고 저하고 전국을 투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절대 그 점을 유의해서, 유념해서 하기 바라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유의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식 처장 명함인데 왜 김대식 처장 명함에는, 다른 평통사람들이 다 평통 로고를 박아 가지고 다니는데 김 처장은, 다들 보이시지요? '청와대' '대한민국', 이 로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딱 보고, 그 옆을 봐요. 바로 '사무처장 문학박사 김대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와대 사무처장인 줄 알지 않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 명함은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제가 15일 동안 저 명함을 썼습니다. 왜 썼느냐?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민주평통……

○문학진 위원 청와대 누구 허락을 받고 썼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제가 임명을 받을 때 어떤 의

견이 있었느냐 하면 '오른쪽 로고가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을 사타구니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엄청난 여론이 있어서……

○문학진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로고에 문제가 있고 로고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어쨌든 지금 평통의 로고는 이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맞습니다.

○문학진 위원 이것을 쓰다가 처장이 주도를 해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로고가 문제가 있으면 로고를 바꿔서 쓰면 될 것이지 도대체 김대식 사무처장이…… 저거 딱 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청와대 사무처장 같잖아. 저러고 다니면 안 되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래서 제가 15일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명함을 위원님에게 드린……

○문학진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 누구 직원 시켜서 지금 바로 주세요. 이리 가지고 오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드리겠습니다.

(명함 전달)

○문학진 위원 지금은 평통 로고 박았구먼.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청와대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썼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저 명함을 다 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로 저는 쓰지 않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저것을 써도 무방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것을 썼는데……

○문학진 위원 어떤 청와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 줬는지 몰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원래 지난 정부에서는 저 명함을 쓴 적도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누가 청와대 사무처장이라고 저렇게 박아 가지고 다녀요? 나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나는 저렇게 박아 가지고 다니는 민주평통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삼가 달라 그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가뜩이나 김 처장이 정권의 실세라고 거의 자칭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부를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 지적이에요. 아셨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주일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이 되고 세세한 것, 디테일한 사항보다는 원칙과 방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북 문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비핵, 개방 이런 것이 있겠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역시 또 공존·공영이지요, 길게 봐서는.

○권영세 위원 예?

○통일부장관 현인택 공존·공영이 되겠습니다. 평화가 물론……

○권영세 위원 공존·공영.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비핵과 개방 그다음에 남북 간의 화해를 통해서 분단의 고통을 줄이고 민족의 이질성을 줄여나가서 동질성을 보장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것도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통일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당연히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권영세 위원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목표에서 DJ 정부 이래 직접적으로 중단기적인 목표, 당연히 '중단기적' 이럴 수는 없겠지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YS 정부 때 만들어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렇게 지금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놔두고 중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취임하시고 새롭게 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가다듬어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금도 하나의 큰 기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기조는 큰 틀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담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당장 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기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질의를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통일을 제외하고,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이고 중단기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비핵·개방·남북 간의 화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도구, 툴박스에는 어떤 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가 있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영세 위원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도적 지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바로 그 툴박스에 우리가 가진 수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홍정욱 위원이었던가요? 경제지원 부분도 우리는 지난 10년간 지나치게 많이 줬다고 주장을 많은 분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 2억 불이 채 안 된다 그랬지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 40억 불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결정적인 툴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제사회로의 안내자 역할 부분도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데리고 안내해서 나갈 필요는, 북한에서 반드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군사적인 수단은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애틋하게 민족 문제는 같은 민족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민족적 대의, 이것은 외교 문제에 해당되는 준외교 관계인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말입니다.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런 것들이 좀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영세 위원 글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눠서도 그렇고 다 합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마땅한 유인책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용이 가능한 식량이나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중국이나 국제사회를 통해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을 막 갖다 준다든지, 실제 지난 정부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광케이블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전적으로 북한 입장에 민족의 입장에서 공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실질적인 진전으로는 되기 어렵다, 완전히 대결의 상태에 있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조금 문을 여는 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고 또 지난 정부가 그렇게 해왔던 게 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역시 의미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남북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반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북문제이자 국제문제이고요.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수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상당히 풍부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영세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풍부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풍부한 수단이 있다면 대개 어떤 것이 있겠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황진하 간사,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또 비핵 개방 3000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소위 3000불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것은 저는 대단히 그랜드 플랜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보지도 않았던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그랜드 플랜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글쎄,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아마 거꾸로 우리 한나라당 여당 쪽에서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니까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비핵 개방 3000에서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부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유인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통일부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통일부에 질타를 하신 내용이 사실은 다른, 통일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을 남북대화로 끌어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통일부의 임무가 아니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야 되느냐, 이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북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북의 니드(need)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북의 니드 중에서,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요. 우리 쪽에서도 줄 수가 있는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연구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위원장대리 문학진 나중에 보충하세요.

○권영세 위원 보충 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보충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런 유인책이라든지 전략적인 전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텐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양한데 통일부 안에 목소리는 하나만 있다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도 다양한 목소리, 물론 바깥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통일부 안에 좀 다른 목소리,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곤란하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처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금년도 지원 예산은 북한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협력기금은 1조 5000억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1조 5000억?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그동안 퍼주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무역액 증가를 보면 북·중 간에는 42% 증가를 했고 남북 간에는 1.2%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 속도

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작년에는 조금 특수합니다. 대화가 닫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증가했다는 사실에 유념을 해 주시면……

○김충환 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올해는 아직은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액이라든지 지원 액수를 보면 남한과 북한 간의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관으로서는 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동포들이 굶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통계적으로 아까 보니까 100만t이 부족하다고 그랬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117만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117만t이 부족하면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아에 허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만나본 탈북자들은 왜 탈북했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배고파서 탈북했다고 말합디다. 그리고 그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100% 여자들의 경우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흑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리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다시 송북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관계부처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또 그 분들이 오는 관계국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외교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2항을 보면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노력 또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정책, 군사적인 합의를 무효화하는 조치라든지 또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우리 이명박 정부 또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상황은 지금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김충환 위원 결국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황은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데, 크게 본다면. 비핵 개방 3000이다, 이렇게 꼭 말한다기보다도 어쨌든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추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이 정책적인 목표와 현실이 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자신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국방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결국은 전투에 대한 것까지도 상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

금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김충환 위원 어떤 조치를, 국방부장관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대결구도를 상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 법의 정신에서 볼 때 어떤 조치를 해야만 통일부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통일부로서는 제가 취임사에도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하여간 북한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의해 놓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충환 위원 만약에 저쪽이 제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도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무슨 복안이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전에 유엔의 어떤 원칙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진전된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즉 전 세계에 여러 비민주적인 관계도 있고 또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인데 한번 발전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유엔의 여러 활동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진전된 화해·협력 관계가 거꾸로 가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남북대화가 제대로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관님이 행정을 하는 동안에 남북관계가 더 이상 발전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해·협력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꾸로 가지는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잘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6·15하고 10·4 선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관께서 이 선언을 합의 이행하도록 정신을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하기를 보도하는 신문들이 죽 쓴 것을 보면 전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다 보도가 됐어요.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안 지켜도 된다, 대한민국이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다 그렇게 제목을 달고 내용도 그렇게 썼는데 장관도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10·4 선언이나 6·15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MOU적 성격인 하나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하는데 왜 이것을 정신을 지킨다고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원칙은 양쪽의 국가 책임자들이 정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국가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정해진 합의는 지킨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충환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통일부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재임 기간 우리 통일부 업무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감사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엉뚱할지는

모르겠는데 장관님 취임하시면서 통일부장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이것은 통일부장관 때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 두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지금 남북대화가 얼어붙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한 단계 남북관계가 더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진전된 관계를 제 재임기에 갖는다면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예, 그런 목표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남북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비핵화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 두 가지의 투 트랙(two track)을 분명히 추구한다라고 한 것이 저희 입장이지요? 지금 장관님도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黃震夏 委員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6자회담 틀 속에 있는 비핵화는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한 것처럼 불능화 단계를 거쳐서 핵의 폐기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닌 그러면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순서로 6자회담에서 가는 그러한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6자회담에서 가지고 있는 로드맵, 그것도 물론 북한도 합의한 사항이긴 한데도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오늘 현황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핵문제 관련 동향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3일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여기를 보면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그다음에 핵보유국 간 핵군축 등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사 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했고요.

2월 2일날 총참모부 대변인 핵군축 협상 주장에 있어서는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북한은 스스로가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부에서 1월 13일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발표 중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포함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그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공식문서 상에도 마치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 같은,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문건들이 자주 나와 가지고 우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클린턴 국무장관도 명백히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는 것을 최근에도 밝혔기 때문에 그 점은 미국 정부의 설명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사항을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미국은 위협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서에

서는 그것을 발행하면서도 핵보유국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에다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 가야 되는지 하는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우리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2월 3일서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었던 데이비드 앨튼(David Alton)이라고 영국 상원의원단 일행이 북한을 갔다가 한국을 거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데이비드 앨튼 일행이 정책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더니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 간 선언에 대해서 일부 조항은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부 이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세계일보 2월 19일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종혁 부위원장의 개인의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북한 자체도 6·15 선언과 10·4 선언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무조건 다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이종혁의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종혁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원 발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때 영국 대표단하고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영국 대사를 통해서든지 이 진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비핵 개방 3000이 너무, 북한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니면 강경 대북정책이다라고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상생과 공영 정책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물론 말 한마디 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진정성, 진정성 많이 말씀하시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대남 관계에 있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반대한다라는 쪽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간단치 않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이 결과는 나중에라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통사무처장 말씀이지요, 평통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학진 간사,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모 신문에 기고할 때 자기 이름을 내 가지고 한 그 기고 방식이라든지 평통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 둔다 하는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오전에 제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데 대해서 답변이 불확실했는데 현 정부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아침에 제가 말씀해 드린 1조, 2조, 3조, 6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게 맞는지, 북한은 분명히 이것을 벗어나고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 그리고 국내외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

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 지난 16일 대정부질문 시에 6·15 선언, 10·4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이라고…… 정치적 선언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약이라든지 이런 구속력 있는 합의하고 다르다 이런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보통 일반적인 조약, 서명은 어떤 급에서 합니까? 장관, 외교장관이 많이 합니다. 장관도 하고 국장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MOU나 사이드 레터 이런 것은 과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남북 간 선언한 것은 누가 서명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정상이 했습니다.

○송민순 위원 양쪽의 제일 고위급에서 한 거지요, 최고위급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남북 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조약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른 국제적 조약하고 달리했을 뿐이지 최고위급에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약하고 달라서 이게 마치 이행할 의무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0·4 선언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농수산 협력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협의 추진한다, 한강 하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명시해 놓게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총리회담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정신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는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남북총리회담에서 해 놓은 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게 그게 이행입니다. 지금 바로 도로를 닦고 무슨 조선소를 짓는 게 그게 이행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전 정부가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전체가 이렇게 비틀려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10·4선언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었던 총리회담 전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권리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폭 넓은 시각에서 보고……

아니, 협의를 한다는 게 의무사항이지 도로를 닦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 후에 나오는 다음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이고 6·15 그리고 10·4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지금까지 협의된 대로 이행을 하겠다, 이행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행에 대해서 하여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대로 협의할 의무를 서로 이행하자 그러십시오, 협의할 의무를 서로 이행하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급에서든지 관계없이 북한하고 진정하게 대화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면 당연히 남북 정상 간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합의를 원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만약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그건 곤란한 거지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하고 합의 서명을 한 건데 다음 지도자 우리 대통령이 와서 '아 그건 전에 대통령이 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길게 역사적 시각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현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 통찰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좀 하십시오,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으로 송영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사실 불만스럽습니다. 계속 답변이 유념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좀 속 시원한 아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딱 장관 기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액션 플랜(action plan)이나 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달라는데 계속 유념하시겠다라는 말씀만 하셔서 상당히 지금 불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유념만 하다가 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PSI 심사숙고 하겠다', 몇 년간 심사숙고 아직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셀리그 해리슨이 지난 1월 13일에서 17일 나흘간에 걸쳐서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제가 사실은 이건 외교통상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직접 제가 워싱턴에서 한 며칠간 만났는데 나흘 가 있으면서 이근 외무성 미국국장, 박의근 외무성장관, 김영태 최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춘복 국방위원 대변인을 다 만났어요. 하루하루 따로따로, 어떤 사람은 6시간 반 어떤 사람은 45분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세 가지입니다.

북미수교를 먼저 해야 비핵화하겠다, 두 번째 김정일 8월달 수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사실 이거는 왕자루이도 갔다 오고 난 뒤에 흉터가 없다 했고 셀리그 해리슨이 워싱턴에 와서 프랑스 신경외과 의사한테 통화해 보니까 '사실은 김정일을 수술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김정운의 교통사고로 그 사람을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김정일이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컨커션(concussion)을, 경련을 일으켰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하고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 것은 제가 지켜본 북한입니다. 10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사진은, 저는 몇 번이나 글을 썼습니다. 가짜다, 가짜입니다.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셨습니까? 비교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언론에 나온 정도는 제가……

○송영선 위원 언론이 아니고 장관님이 직접……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가짜,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날 찍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시찰을 갔는데 밑에 신화(xinhua)라고 적혀 있는데 바지 색깔이 달라요. 물론 바지를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따라다닌 사람은 몇 명 앞에만 같고 뒤에는 또 다른데 바지 색깔도 다르고 몇 가지를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히 많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음에 비해 클린턴 장관은 뭐라 했느냐 하면 정면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시, 폐기 시를 영어로 디스맨틀(dismantle)이라 했습니다. 폐기 시에 북미수교 하겠다, 경제지원 하겠다, 다 주겠다 했어요.

장관님은 전문가십니다. 또 본인도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이라 했는데 디스맨틀이라는 용어는 개발 시에 절대 안 씁니다. 핵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디스맨틀이라고 쓰지 디스맨틀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미국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NPT를, 그런데 지금 계속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요. 1993년부터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네 번째 치킨게임을 하는데 세 번 다 미국이 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글을 썼지만 미국이 이번에 또 진다, 왜? 강온 양 작전을 다 내놨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생각하는데 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NPT 탈퇴하면 핵무기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

이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NPT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NPT 체제를 그렇게 강조해 왔던 것을 지금 모아 가지고 수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되지만 핵무기 보유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도 제가 볼 때는 장관님 논문이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북한이 분명히 핵개발 했다고 생각하고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간 논문을 보면 정말로 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돈으로? 우리가 준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겁니다.

제가 계속 명확한 태도를 보여 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북쪽이 현인택 장관이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온갖 나쁜 보도를 보내는 게 현 장관이라는 사람을 알아서, 미워서가 아닙니다. 현 장관이라는 분은 이때까지 철학을 보니까 과거 10년간 묻지마식의 남한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다,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장관이 되면 우리한테는 국물도 없겠구나 그걸 걱정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인택 장관이 에너지와 돈을 들고 가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원하는 것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쪽에 요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미사일에 대해서 돈을 직간접적으로라도 안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발탁이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가 이중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 도리어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북한은 엄연하게 핵보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국 아니면 왜 미국이 디스맨틀이라 하고 우리가 비핵을 주장을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과거 10년의 대북 정책이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금지원은 안 된다, 대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만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다, 협조할 수 있는 영역과 협조할 수 없는 영역을 가르는 것이 바로 대화이고 외교다, 유화정책이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해 주시면 국민들도 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와 가정이 다르다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가정이 같다라고 이때까지 장관님의 논문이나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아까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 정신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왔거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정신을 인정하는 것과 그 선언을 인정하는 것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아니라도 한번 좀 말씀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10·4선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원칙에 대한 것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경우에는 북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 속에 긴장완화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황진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직접 주는 경우에는 저쪽이 뭐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거고 또 민간단체를 통하는 경우는 민간단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그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하나로서 지금 외무부가 하고 있는 KOICA와 같은 방식 그런 방식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 간에 대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남북간에 지원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민간단체의 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벌써 한 180억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80여 개 단체가 이미 공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심사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보다 훨씬 액수가 늘어났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18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북간에 필요한 정도의 협력 체계, 전체 규모에서 본다면 액수가 아주 적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상대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충환 위원 상대적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물론 뭐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놓고 볼 때 필요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선정에서 여성과 40대 이하를 30% 이상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김충환 위원 그게 지킬 수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30%와 40대 이하 30% 확보를 위해서 각 추천기관별로 설명회를 했고요. 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면서 반드시 지켜 달라고……

○김충환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번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목표만 정해 놓고 항상 안 되는 것, 변명 이런 것보다 꼭 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가능한 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항상 보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쇄신 비율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지금 쇄신 비율을 한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그 중립성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한 민간 대북지원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영유아식에 중점을, 초점을 맞춰서요……

○김충환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통일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통일부장관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은 정부 헌법기구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지금 남북 어린이들 키가 6살 먹은 애들이 8㎝ 이상 차이난다고 하니까 낙농제품 또 그밖에 비타민 이런 것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을 좀 충분하게 민주평통의 나눔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특히 영유아들의 문제는 저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약 한 1만 5000명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을 한 달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도 조금 더 한번 적극적으로 늘리고, 제가 볼 때 한 6개월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만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얻거나 정착하는 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지방자치단체와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앞으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해외동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이건 평통자문회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 선임할 때 심의 절차를 지금까지는 공관에 그냥 맡겨 놓고 했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내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더 객관적이고 또 믿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심의 절차를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경필 위원, 이미경 위원, 권영세 위원, 송영선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로부터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통 사무처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

2.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삼 의원 대표발의)(이용삼·강창일·유성엽·문학진·허천·최인기·송훈석·박선숙·김상희·송영길·이윤석·김성곤·이계진·이광재·최연희·강기정·박주선·우제창·조정식·최철국·이춘석·서갑원·노영민·최규성·장세환·최욱철·황영철·원혜영 의원 발의)

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임태희·주광덕·김정권·박종희·홍준표·신상진·김성태·배은희·권택기 의원 발의)

4.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백성운·이인기·손범규·정옥임·윤상현·신지호·이학재·여상규·성윤환 의원 발의)

5.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황우여·황진하·이경재·김소남·김효재·한선교·이한성·구본철·김성회·이화수·신지호·김옥이·조전혁·박상돈·김성수·양정례·정갑윤·진성호·현경병 의원 발의)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박종근·이주영·허천·이철우·허범도·안상수·유정복·한선교·송영길·유승민·여상규·황진하·송영선·박대해·원희룡·이진삼·유기준·유재중·이계진·강석호·이인기·임두성·박준선·김학송·이명수·김정훈·윤석용·이상득·김성수·윤상현·김기현·신성범·최연희·이재선·이해봉·김효재·백성운·구상찬·홍정욱·윤두환·현기환·진영·정병국·이진복·정몽준·김충환·이회창·홍사덕·김충조·나경원·김동성·황우여·이경재·박상천·정진섭·장광근·유정현·신상진·임해규·김성곤·김을동·성윤환·임동규·우제창·이성헌·고승덕·홍일표·정해걸·허태열·김태환·이사철·신지호·이석현·이시종·김소남·이용희·이인제·김영선·조진래·김정권·최구식·권영세·김선동·정진석·박선영·박진·전여옥·안홍준 의원 발의)

7.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충환·류근찬·박상돈·변웅전·심대평·이명수·임영호·정영희·황진하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용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의사일정 제6항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 내지 제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議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황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하여 제출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는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울 수 있도록 남북 공동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에서는 우선 1단계로 개성공단에 대한 대응 특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경제적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특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체제 전환을 위한 경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역할 및 남북교류의 체계화·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제정안은 남한 입장에서는 먼저 통일을 위한 선 투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경제 활동의 장이 열린다는 측면과 함께 종국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타 법령의 계획을 준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통일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경제특구의 기본정책, 제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사무처의 성격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고, 남북한 사이의 증가하는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안은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것은 바로 경제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허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서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이용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황진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종국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평화산업단지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측면에서 2건의 제정법률안은 제정 목적, 평화산업단지 또는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 사항, 지정의 효과,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세제 및 자금 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그리고 남북합의서의 특례 등에서 같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삼 의원안에서는 강원도 철원군 평화지역 내에 평화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반면, 황진하 의원안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통일경제특구를 인접 지역 내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양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법률안과 같이 평화산업단지 또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여 단지 내의 투자 기업이 북한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법의 제정 후 시행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이 법안이 현재의 남북 관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의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및 부처 등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정법률안은 이미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도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이 법안들과 병합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이 법률안들의 정의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 등에 대한 연구·분석과 정책 개발을 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황진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과 윤상현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북한인권법안 등 3건의 법안과 제정 취지 및 북한인권자문위의 설치 등에서 유사한 측면 있어 이들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은 법률안 내용 중 북한인권자문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2건의 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및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통일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북한인권증진법안 또는 북한인권법안이 의결되는 경우, 이 법률안에 의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규정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재단의 사업, 재단 운영, 예산, 벌칙, 과태료 규정 등에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이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황진하 의원 대표발의의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의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도 북한주민과 함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두 법안과

는 달리 본 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북한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문제가 이미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내용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대강은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북한인권 관련 부처의 의견도 수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등 네 가지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원 조건을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황진하 의원안과 황우여 의원안과 비교할 때 상당히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등 분배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현실과 인도적 지원과 지원 조건을 의무적으로 연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위축 가능성 등을 절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와 같이 인권위원회의 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벌칙 등에서 일부 내용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과 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비슷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두 안은 공통적으로 납북자의 생사 확인 등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 6·25전쟁 중 납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진상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안의 주요 차이로는 피해자 및 귀환납북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박선영 의원안에만 이 내용과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진상조사기간, 기념사업의 추진 여부, 납북자 가족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두 법안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목적이 거의 같고 전반적인 내용도 유사하며 법안 간의 세부적인 차이도 조정이 가능할 정도이므로 이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각 법안의 내용을 종합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안의 경우 주된 목적으로 6·25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규정하고 있으나 박선영 의원안의 경우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박선영 의원안과 같이 6·25전쟁으로 인하여 납북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이외에 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및 보호와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보상까지 법에 규정하게 될 경우 피해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사절차가 보다 엄격하고 복잡해져 조사완료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무성 의원안과 같은 내용을 선호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안 중 어느 안을 중심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진상조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안 제8조에서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박선영 의원안의 경우 안 제16조에서 진상조사기간을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의 기간으로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북 사건에 대한 단시간의 조사완료를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 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사완료시점을 짧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6·25전쟁 중 납북사건의 경우 납북당사자의 부재, 당시 증인 및 기록의 훼손, 8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의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2년의 기간 내에 이들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간연장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사개시 이후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박선영 의원안과 같이 기간을 보다 장기로 하고 기간연장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6·25전쟁 명칭, 납북자 및 남한에 대한 정의,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기념사업추진 및 납북자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 벌칙적용에서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과태료 규정 등은 배부된 검토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송영선 위원 황진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법은 사실 여기에서도 전문위원이 설명해 놨지만 이미 이경재 의원님이나 임태희 의원님이 내신 남북경제특별구역 혹은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이 통합해서, 이미 이것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병합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하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중에서, 법안 비교를 해 놓은 2페이지를 보면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관리기구에 대통령 소속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2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황진하 의원님 법이 굉장히 종합적인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15개 부처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토해양부나 그다음에 환경부, 노동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같은 데는 20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이 되고 법도 관련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같은 데도 6개지만 아주 민감하고, 노동부 또한 그 지역에 대한 노동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파견근로자라든가 근로기준법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농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농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께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에서 부위원장을 그냥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으로만 지명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장관님들을 다시 한번 폭넓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제일 마지막의 김무성 의원님이 제안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하고 박선영 의원님이 낸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이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시 납북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관련되는 사람까지도 명예회복을 해 주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 법안이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병합심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을 만드는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전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 좀 조건 없이 일차적으로 전후 납북피해자지원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것인가를 그냥 관계 부처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오랫동안 회장을 해 온 전시 납북피해자 단체에서 회장을 해 온 이미일 회장을 먼저 불러서, 사실 전시 동안만 8만 9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소위에 불러 가지고 정말 그 단체에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쪽부터 먼저 갈라서 할 테니까 이의가 없겠나라는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우선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일부장관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인권은 다 존중되어야 되고,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인권이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씀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북한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는 다 외칠 수 있어도 한 인간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법도 만들고 행정부에서도 그것을 시행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북한에 식량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노력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또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물자가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통일부 시각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지금 내부 문제 불간섭 원칙이 합의되어 있지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내부 문제 불간섭인데 인권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또 지금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내부 문제 불간섭에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국제사회에서 서로 대립하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 외교부에다가 북한인권대사를 두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개인의 인권은 증진되어야 되고 또 북한은 우리한테도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상적 원칙과…… 실제로 이것을 집행해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있는지? 지금 북한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상과 원칙의 한 측면이 있고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하고의 상충 때문에 항상 통일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생긴 이래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하고 제6조, 제2조 내정불간섭하고 제6조의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하는 이 조항하고 이것이 서로 상충이 안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만약에 상충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기본합의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 현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다시 리디파인드(redefined), 재정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통일부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현인택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인권이 인류보편적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아까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과연 이것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지금의 남북한 관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통일부 자체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기는,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 조항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부 조항에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남북기본합의서 문제에 있어서 내부 문제 불간섭 문제는 북한인권이라고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인류보편적 차원의 가치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통일부의 입장을 장관이 나와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듣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많은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합의서에 되어 있는 데서 우리 자체가 벗어나 버리면 북한 보고 '너희 지켜라. 남북한의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되도록 하고 군비통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라.'고 우리가 북한한테 높은 도덕적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부장관님께서 그냥 원칙적 선에서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법안소위에서 토의할 때 통일부의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안 될 겁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탄력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일단 지키고 그 선에서 다른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시든지 그 선택을 해 주셔야 국민들도 분명하고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할 때도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우리가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북한인권 문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류보편적 차원의 가치에서 접근을 하고, 그것이 반드시 저는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간섭하는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북한 내부 문제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안 내용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까?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보편적 차원의 가치에서 접근하는 그런 법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분명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여하겠다면 정부가 확실하게 그 입장을 취해 주세요. 그냥 피해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아, 현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구나'

그것이 정책의 진정성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진정성, 진정성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일관성 있고 진정한 것입니다. '좋다. 우리는 북한 현재 상태로 못 두겠으니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 관여를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분명히 천명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예견을 하고 분명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말은 기본합의서 정신 존중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나가는 법안이나 이런 데 대해 취하는 자세는 애매하게 상충되는 자세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송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송 위원님, 잠깐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 답변하셨는데, 관련해서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송민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통일부의 정확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도 아직 대북정책 줄기를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소위를 할 때 장관을 직접 모셔 가지고, 좀 시간을 주고 이건 큰 변화니까 통일부 자체 내에서 내부 정책의 가닥을 잡아와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황진하 위원님!

○黃震夏 委員 송영선 위원님하고 송민순 위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송영선 위원님께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계에서 멤버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계 부처 장관들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죽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님이 내신 6·25 납북피해자 관련 법안에서는 납북자가족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쪽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인권법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정불간섭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방금지 이런 것과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사항에 대해서는 유엔헌장에서도 국가주권과 안전보장은 병행해서 규정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의 주권사항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과제라고 아까 통일부장관도 적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엔헌장에 나와 있는 정신도 저희는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정불간섭이라고 북한은 아픈 데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또 송영선 위원님, 양 송 위원님께서 끝까지 남아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황진하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끝까지 남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구 상 찬	권 영 세	김 충 환	남 경 필
문 학 진	박 상 천	박 선 영	박 주 선
박 진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안 상 수	이 미 경	이 상 득	이 춘 식

이 회 창　정 몽 준　정 옥 임　정 진 석
진　영　홍 정 욱　황 진 하

○출장 위원(1인)

문 국 현

○청가 위원(1인)

정 세 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영 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 관	현 인 택
차 관	홍 양 호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중 태
남북교류협력국장	황 부 기
남북회담본부장	홍 재 형
통 일 정 책 국 장	김 천 식
인 도 협 력 국 장	천 해 성
대 변 인	김 호 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 영 탁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설 동 근
남북출입사무소장	양 창 석
남북교류협력협의 사 무 소 장	유 종 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무 처 장	김 대 식
기 획 조 정 관	김 점 준
통일정책자문국장	장 득 순
정 책 연 구 위 원	김 영 구

【보고사항】

○소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원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정옥임	진영	한나라당	2009. 2. 17
예산안·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구상찬	김충환		
청원심사 소위원회	정세균	이미경	민주당	
외교통일 전략 및 역량강화 소위원회	이미경	정세균		

○의안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2. 11 송영선·이한성·유성엽·김을동·김충조·김태원·권영길·정영희·김우남·백재현·이애주 의원 발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09. 2. 11 박은수·양승조·정하균·김춘진·이미경·강창일·권영길·백원우·전현희·최영희·곽정숙·이정희·송민순·김상희·최문순·유성엽·장세환·윤석용·전혜숙·이정선·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회부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

(2009. 2. 13 이강래 의원 외 80인 발의)

2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

(2009. 2. 12 박병석 의원 외 81인 발의)

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